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23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 의 자 : 남인순 · 김남근 · 김 윤
김남희 · 이수진 · 이주희
최혁진 · 손명수 · 전진숙
서영석 · 송재봉 의원
(11인)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노인의 노후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고, 향후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그런데 그간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기관의 진입을 장려한 결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낮은 임금 수준, 과도한 업무 부담, 불안정한 고용 등 장기요양요원의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현행 구조에서는 비용이 부적절하게 집행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 역시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장기요양기관을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마. 공단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사.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변경함(안 제32조의3).

아.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차.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5조의4제7항 신설).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35조의6 신설).

타. 공단은 급여비용의 심사 후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

파.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24인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46조).

하.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업무에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인한 고충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47조의2).

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안전조치, 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사례관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단이 관리하도록 함(안 제48조).

너.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더. 공단이 장기요양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례관리회의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관을 말한다”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공 장기요양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기관

나. 민간 장기요양기관: 공공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기관

제4조제4항 중 “국·공립”을 “공공”으로, “노력하여야”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처우에 관한 사항”을 “처우 개선, 지위 향상 및 인력확보 방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대응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

5. 제6조의3에 따른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 및 확충 계획
제6조의2제1항제4호 중 “처우 및 규모”를 “처우, 규모 및 인력수급추
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기요양급여의 수요전망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제1장에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요전망의 100분의 30 이상을 공
공 장기요양기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공 장기요양기관 공급 비율의 산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장기요양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장기요양기관 간의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4조의3에 따른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후단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4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회의와 제54조의3에 따른 관할 지역사례관리회의 의견을 들어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복합적인 장기요양 욕구를 가지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2.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4.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수급자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가족과 동거하는 수급자

⑥ 제5항에 따른 사례관리회의 및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의견 청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급자에 대한 교육) ① 공단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에 따른 갱신 신청으로 제17조제1항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공단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의 대리인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급자 및 그 가족은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3 중 “6년”을 “4년”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수급자로부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수급자가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거부한 경우
3. 수급자가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요구한 경우
4.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의3제2항 중 “수급자에게”를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인인권교육을 포함한 수급자 권리에 관한 사항
2.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인권침해행위의 금지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 권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의4제1항제1호 중 “폭언”을 “괴롭힘·폭언”으로, “행위”를 “등의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내할 수 있다”를 “안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요원의 최소근로시간은 1일에 5시간, 1주일에 2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이하 “적정 인건비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적정 인건비 기준의 기본급은 월단위로 정하며 장기요양요원의 직무교육기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동일한 장기요양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경력을 합산하여야 한다.

⑥ 장기요양기관은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근로조건의 보장, 적정 인건비 기준의 산정, 장기근속장려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건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37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장기요양기관이 제54조에 따른 공단의 평가 결과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 중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

며,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을 “심사하여 그 내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해당”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을 “제2항에 따라 인건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16인”을 “18인”으로, “22인”을 “24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및 의료계를 각각 대표하는 자
제4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4.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로 받은 피해에 대한 고충 상담 및 의료 지원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 장기요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6.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제48조제2항제7호 중 “가족”을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으로, “이용지원”을 “이용지원 및 안전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표준 수립·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평가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에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사례관리회의 등)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사례관리회의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례관리회의는 수급자의 욕구 조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수립, 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③ 사례관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사례관리회의의 위원장은 제5항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노인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
3.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사람
4.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사람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례관리회의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3(지역사례관리회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장기요양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사례관리회의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례관리회의는 그 관할 구역의 노인단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 및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위원 수는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행정적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역사례관리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69조제1항에 제1호의2·제3호의4 및 제3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단의 교육을 거부한 사람

3의4. 제3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장기요양기관

3의5.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장기요양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3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게 재가 또는 시설급여비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u>기관</u> 을 말한다.	4. ----- ----- ----- ----- <u>다음 각 목</u> <u>에 해당하는 기관</u> 을 말한다.
<u><신 설></u>	<u>가. 공공 장기요양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기관</u>
<u><신 설></u>	<u>나. 민간 장기요양기관: 공공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기관</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③ (생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
·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신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
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1. 2. (생략)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신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공공-----
-----적극적으로 노
력하여야-----.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
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전문
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
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처우 개
선, 지위 향상 및 인력확보
방안

4.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대응
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

<신 설>

4. (생 략)

② (생 략)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
부장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
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5. (생 략)

② (생 략)

<신 설>

5. 제6조의3에 따른 공공 장기
요양기관의 설치·운영 및 확
충 계획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실태조사)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처우, 규모 및 인력수급추
계-----

5. 장기요양급여의 수요전망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급
여의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사
항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3(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신 설>

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요전망의 100분의 30 이상을 공공 장기요양기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공 장기요양기관 공급 비율의 산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장기요양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 (생략)

②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

여야 한다.

②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장기요양기관 간의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4조의3에 따른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신설>

-----구청장은-----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4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회의와 제54조의3에 따른 관할 지역사례관리회의 의견을 들어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복합적인 장기요양 욕구를 가지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2.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4.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신 설>

<신 설>

을 위반한 수급자 또는 그러
한 행위를 한 가족과 동거하
는 수급자

⑥ 제5항에 따른 사례관리회의
및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의견
청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수급자에 대한 교육)

① 공단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장
기요양급여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에 따
른 갱신 신청으로 제17조제1항
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공단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장기요양급
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
급자의 대리인에게 제17조제1
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

<p>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생략)</p> <p><u><신설></u></p> <p>② (생략)</p> <p>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u>6년</u>으로 한다.</p> <p>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p> <p>① 장기요양기관은 <u>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신설></u></p>	<p><u>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③ 제1항의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수급자 및 그 가족은 장기요양요원에게 <u>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 -----4 년-----.</p> <p>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p> <p>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로부터</u> ----- ----- -----.</p> <p><u><단서 삭제></u></p> <p>1. <u>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u></p>
--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⑦ (생 략)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생 략)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
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우

2. 수급자가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거부한 경우

3. 수급자가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요구

한 경우

4.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제28조

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괴롭힘

· 폭언 · 폭행 · 상해 또는 성

희롱 ·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실시하여야 한다.

1. 노인인권교육을 포함한 수급

자 권리에 관한 사항

2.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인

<신 설>

③ ~ ⑤ (생 략)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생 략)

② (생 략)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권침해행위의 금지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 권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

-----.

1. -----
-----괴롭힘·
폭언-----
-----등의 행위-----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신 설>

<신 설>

-----안내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의6(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요원의 최소근로시간은 1일에 5시간, 1주일에 2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

요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장기
요양기관의 장이 「근로기준
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
준(이하 “적정 인건비 기준”이
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맞
추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하
여야 한다.

④ 적정 인건비 기준의 기본급
은 월단위로 정하며 장기요양
요원의 직무교육기간, 재가급여
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이 반
영되어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장기요양요
원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
하여 산정하며, 동일한 장기요
양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경력
을 합산하여야 한다.

⑥ 장기요양기관은 적정 인건
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근로조건의 보장, 적정 인건비 기준의 산정, 장기근속장려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시정명령) -----

-----명하여

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
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
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
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
건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
여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신설>

② ~ ⑧ (생략)

<신설>

경우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장기요양기관이 제54조에 따른 공단의 평가 결과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p>⑨ (생략)</p> <p>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생략)</p>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u>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u></p> <p>③ ~ ⑤ (생략)</p> <p>⑥ 장기요양기관은 <u>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u></p> <p>⑦ · ⑧ (생략)</p> <p>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p>	<p>⑩ (현행 제9항과 같음)</p> <p>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심사하여</u> <u>그 내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장기요양기관</u>----- ----- ----- ----- ----- -----<u>인건비와 운영</u> <u>비로 구분하여 해당</u>-----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제2항에 따라 인건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u>----- ----- -----.</p> <p>⑦ · ⑧ (현행과 같음)</p> <p>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p>
---	---

<p>①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u>16인</u> 이상 <u>22인</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p> <p>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u>말한다</u>),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p> <p>2. <u>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u></p> <p>3. (생략)</p> <p>③·④ (생략)</p> <p>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p> <p>①·② (생략)</p> <p><u><신설></u></p>	<p>① ----- ----- ----<u>18인</u>-----<u>24인</u>----- -----.</p> <p>② ----- ----- ----- ----- ----- -----.</p> <p>1. ----- ----- ----- -----<u>말</u> <u>한다. 이하 같다</u>----- ----- -----</p> <p>2. <u>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및 의료계를 각각 대표하는 자</u></p> <p>3.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p> <p>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u></p>
--	---

<p>③ (생략)</p> <p>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u>운영할 수 있다.</u></p> <p>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생략)</p> <p>2. <u>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u></p> <p>3.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 ----- ----- <u>-운영하여야 한다.</u></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장기요양요원의 보수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u></p> <p>3. (현행과 같음)</p> <p>4. <u>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로 받은 피해에 대한 고충 상담 및 의료 지원</u></p> <p>5. <u>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 장기요양정책에 관한 조사·</u></p>
--	---

<p><u><신 설></u></p> <p>4. (생 략)</p> <p>③ (생 략)</p> <p>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생 략)</p> <p>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p> <p>1. ~ 6. (생 략)</p> <p>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u>이용지원</u>에 관한 사항</p> <p>8. ~ 13.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14. (생 략)</p> <p>③·④ (생 략)</p> <p>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② (생 략)</p>	<p><u>연구</u></p> <p>6. <u>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u></p> <p>7.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 ----- <u>이용지원 및 안전조치</u>----- -----</p> <p>8. ~ 13. (현행과 같음)</p> <p>14. <u>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표준 수립·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15. <u>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u></p> <p>16. (현행 제14호와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p>
--	--

<신 설>

③ (생 략)

<신 설>

③ 공단은 평가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4조의2(사례관리회의 등)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사례관리회의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례관리회의는 수급자의 욕구 조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 수립, 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③ 사례관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사례관리회의의 위원장은 제5항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신 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노인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

3.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사람

4.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사람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례관리회의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3(지역사례관리회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장기요양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사례관리회의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역사례관리회의는 그 관할 구역의 노인단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 및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위원수는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행정적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역사례관리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p>1. · 2. (생략) <u><신설></u></p> <p>② (생략)</p> <p>제69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 <u><신설></u></p> <p>2. ~ 3의3. (생략) <u><신설></u></p> <p><u><신설></u></p> <p>4. ~ 9. (생략) ② · ③ (생략)</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9조(과태료)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u>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단의 교육을 거부한 사람</u></p> <p>2. ~ 3의3. (현행과 같음)</p> <p>3의4. <u>제3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장기요양기관</u></p> <p>3의5. <u>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장기요양기관</u></p> <p>4.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	---